"지자체 지원 끌어내 무상교육 확대"

광주·전남 기자협회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최한 6·2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가 10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을, 김영수, 안순일, 이정재, 장휘국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승범 광남일보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광주일보 박진표, 연합뉴스 송형일, 광주방송 김효성, 기독교방송 유형역, 전남일보 한현묵 기자가 나서 공약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다음은 패널의 질문과 후보의 답변내용 요약.

■ 안순일 후보

교육비리 적발 광주 한 건도 없어

-지난해 시 교육청의 부채 1300억원을 모두 탕감했다고 했는데, 최근 지방채를 재발행해 부채가 다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부임 당시 부채가 1100억원에 연이자만 60억원에 이르렀다. 임기 4년동안 예산을 아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았다. 이번에 발행한 지방채는 신설학교 설립 자금이며, 교과부에서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5년 내에 갚아주기로 한 만큼 부채가 아니다.

-서울발 교육비리로 광주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납품·공사·인사 등 10건 이상의 검·경 수사가 이뤄졌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

■ 이정재 후보

정치단체 탈퇴 1사 1교실 결연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만큼 정당공천도 없다. 이 후보는 1997년 총장을 맡은 이후 50여개의 주요 단체 임원은 물론 4대강 개발에 찬성하는 영산강포럼 대표 등 현재도 40여개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수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영산강포럼은 정치적 색채가 있어 사퇴했으며, 정치단체도 모두 탈퇴했다. 나머지는 봉사단체다. 또 수학과 교수직에 대해서는 휴직이 안된다고 해 현재 교수직을 갖고 있으며, 수업을 소홀히 한적은 없다.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충하겠다는 말인가. 또 13일 후보 등록 이후 교수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교육발전 희망기획단을 구성해 기업체와 1사1교실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고, 발전기금도 많이 모으겠다. 교수직은 그동안 명예퇴직도 생각해 봤지만, 주변에서 만류로 남기로 했다.

■ 장휘국 후보

年 450억이면 무상교육 충분

-무상교육 등 이상적이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공약이 많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무상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액 지원과 수학여행비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연간 추가 예산은 450억원 정도다.

-교육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억원 정도인데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으로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면 교육시설 개선 사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비품과 학교시설물 투자를 아끼면 충분하다고 본다.

-전교조 출신으로서 모든 교육정책이 전교조 방침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기우에 불과하다. 학부모와 교육청 직원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

10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김영수 후보

영어·예술 등 6개분야 무료교육

-김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운영비 미납으로 중단됐다. 항간에선 자금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던데.

▲홈페이지 관리자와 잔금 여부로 이견이 있었다. 선거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며, 중간 사퇴도 하지 않겠다.

-하이컨셉 교육 및 다중지역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개념도 어렵지만 실천방법이 있나.

▲하이컨셉시대에 맞는 차원높은 교육이다. 고도의 창의성이나 감정을 겸비한 나눔과 배려 등 심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수학·예술·체육 등 6개 분야를 무료로 교육하겠다.

■ 고영을 후보

공사립 교사 교환 유치원 의무교육

-공·사립학교 교직원 교환근무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승진이나 학교 적응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광주에서 공·사립 교사 교환 못할게 뭐가 있는가. 필요하면 학원 강사도 투입하겠다. 또한 교사들은 승진이나 적응 등을 떠나 무조건 학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유치원 의무교육 공약은 관련법이 2004년 이미 국회에 통과돼 단계적 시행중인데.

▲몰랐다. 확인해 보겠다.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라면 광주는 전면 시행하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육감 선거는 뽑기 복불복?

14일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앞두고 후보자들 '두번째' 기호뽑기 노심초사

6·2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오는 14일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앞두고 '두번째' 기호뽑기에 내심 기대를 걸면서도 인물과 정책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당공천과 무관한 교육감 후보는 투표용지에 성명만 세로로 나열되는 만큼 민주당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투표용지 게재순위' 두번째를 뽑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은 기호추첨과는 상관없이 민주당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장의 관심이 저조해 두번째를 뽑은 후보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번째를 뽑지 못한 후보들의 사퇴에 이어 후보 단일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두번째를 뽑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교육적 소신이나 참신한 공약이 없는 인물이 당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공약과 인물 검증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도 교육감 후보자의 직접 추첨을 권유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결과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 대리인보다는 후보자가 직접 추첨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첨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시·도선관위에서 실시되며, 먼저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게재순위 추첨 순번을 추첨한 뒤 이 순위에 따라 추첨함에 넣어진 아라비아 숫자가 적힌 공을 선택해 최종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

담양군 광주 편입 추진 배경과 전망

일자리·인구감소 심각 군민 80% 이상이 찬성

담양군 의회가 10일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담양군의 광주시로의 편입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직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뒷짐을 지고 있지만, 지역민 대부분과 담양군수 후보 등이 광주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향후 광주·담양 통합 여부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 결의안 채택 배경=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원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순창과 고창·정읍·장성·담양군을 통합하는 안과 광주 북구와 장성·담양으로 통합하는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민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안 채택을 원하고 있다. 고창과 정읍 등으로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적은 담양군의

국회 특별법 통과해야 가능

광주시는 전남도 의식 관망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생활권인 광주시로 편입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담양 번영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창립된 '광주시·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가 광주시로의 편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면서 '지역여론'을 형성해왔다.

◇군민 80%가 광주와의 편입 찬성=담양 번영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담양군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편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담양군민들이 광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과 경제 문제 때문이다. 자녀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담양 인구가 광주시로 지속적으로 흡수되면서 담양군 인구감소가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추진위는 담양이 광주시로 편입되면 오히려 광주 인구가 담양으로 유입되고 담양인구는 안정을 찾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광주·담양 통합 찬성 서명운동에 군민의 절반 가까운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조래원 추진위 사무국장은 "광주·담양 통합은 담양이 광주에 흡수 합병되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만 전남도에서 광주시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최근 여론조사결과 군민 80%가 광주로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산 기장과 대구 달성의 경우 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 점으로 볼 때 담양군도 광주로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광주로의 행정구역 변경이 더뎌질 경우 국회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편입 가능할까?=하지만, 편입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자부는 '전남도에서 담양군을 폐지하고, 광주시에 담양군을 신설한다'는 행정구역 변경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담양 통합과 관련해 "담양군민 서명운동이 이뤄진다면 서명인명부를 근거로 광주-전남 광역단체 간 경계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점 때문에 쉽게 이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의 신경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도 걸린다. 담양이 편입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전남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인구감소가 예상돼 반기지 않는 눈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